

AI 융합단지·완성차 공장...일자리 5만개 새로 생긴다

광주의 미래 경제지도 바꿀 6대 핵심 사업은?

광주의 미래 경제지도가 확 바뀌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와 올해 정부로부터 경제 관련 6대 핵심사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AI(인공지능), 완성차 공장(광주형 일자리), 에너지 사업 등으로 총 생산유발 효과 10조 364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조 2440억원, 투자유치 1조6000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 5만여개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광주미래,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날개=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이용섭 광주시장의 제1호 공약이기도 한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심의·확정했다.

경제자유구역은 광주 남·북·광산구 일원 4개 지구, 총 437만1000㎡(4.371㎢) 규모다. 이미 4959억원은 투자됐으며 남은 7474억원엔 국비와 시비 각각 15%, 공기업 등 기타 70% 비율로 조달한다. 계획 인구는 2만9256명이다. 광주 경제자유구역은 인공지능(AI)과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등 광주 미래먹거리 산업의 본거지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시는 2025년까지 기투자금을 포함한 사업비 1조2400여억원을 투자해 내외국인 3만명 안팎을 수용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1호 상생형 일자리, 대한민국 경제체질 개선=정부는 지난 15일 광주형 일자리를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하고, 세계 혜택을 비롯한 투자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광주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이미 확보된 국비만 2944억원에 이른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완성차 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복리·후생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자리잡는다면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경제 체질개선을 통해 고임금과 노사갈등 등으로 국내 투자를 꺼리던 기업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고, 해외

경제자유구역 지정 4개 지구
미래먹거리 산업 본거지 육성
AI산업, 기업 등 14곳 벌써 유치
노후산단, 스마트 산단 대개조

로 나간 제조업체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리쇼어링 효과' 등이 기대된다. 코로나19사태 이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기회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합작법인 광주 글로벌모터를 통해 3년간 자기자본금 포함 5754억원을 투입하고 빛그린 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 중인데, 30%에 육박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 2022년부터 연간 10만대 규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한다. 합작법인은 내년까지 908명을 정규직으로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협력업체 등 간접 고용효과를 포함하면 1만2000여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광주미래 견인=2024년까지 광주시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내 4만6200㎡ 규모로 들어서는 'AI 중심 산업융합단지'에는 국비 2799억원 등 총사업비만 4116억원이 투입된다. AI특화데이터센터와 AI융합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 기반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된다. 특히 광주시가 이미 진행 중인 미래형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산업과 AI산업을 융합한 R&D 14개 과제가 집중 추진된다. AI제품과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AI스타트업도 집중 육성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AI관련 사관학교 등 각종 교육기관도 설립 운영된다.

AI산업은 벌써부터 대박 조짐을 보고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범도민 민간 유치위원회 출범식이 25일 오전 무안군 삼향읍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용재 도의회 의장, 한상원 공동위원장,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성공 기원 손편지함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있다. 관련 기업 유치가 나선지 불과 6개월여 만에 국내외 유력 AI기업·기관 14곳을 유치했으며, 이중 티맥스소프트 등 7개사는 광주에 사무실도 개소했다.

◇노후산단 스마트 산단으로 대 변신=정부는 지난달 첨단과학산단과 하남-빛그린산단 등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지로 선정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7657억원을 투입해 노후한 산단을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산단으로 새롭게 단장하는 게 핵심이다. 입주 공장들도 스마트 공장으로 탈바꿈하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산단 조성, 자율주행 교통 시스템 및 IoT기반 교통인프라 구축 등이 이뤄진다. 또 도로와 주차장, 공원 확충 등 노후 SOC도 개선된다. 청년 인재 유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도 진행된다.

광주시는 이번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확산 및 제조데이터 센터 구축, 자동차 관련 산업구조 개선 등을 통해 미래형 산단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3년간 고용 창출 1만명, 제조업 부가가치액 14조 7702억원, 신규기업 유치 369개 등이 기대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 밖에도 2022년까지 광산구 덕림-삼거동 일대 빛그린 산업단지 내에 국비 450억원을 투입해 '청정 공기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청정대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실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시는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공기 강소기업 51개사를 유치해 4225명의 신규 인력을 창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지정한 광주 남구 에너지융합단지도 7200억원대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990년 시작...의협 등 반대 번번이 실패 공공의료 확대 여론에 필요성 커졌다

전남권 의대 유치 노력 30년

전남도가 30년 숙원사업인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지난 1990년 정부에 의대 신설을 처음 건의한 지 30년 만에 유치위원회를 구성했다.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의대 유치가 성공하겠다는 각오다. 지역 안팎에서는 의대 신설을 위한 1차 관문인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을 늘려 전남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2007년 이후 13년간 동결됐다.

그러나 코로나 19 감염병이 뚝치 않게 전남권 의대 유치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 19 이후 공공의료 가능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폭 넓게 형성되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정원을 500명 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목포·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우선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결론 나야 한다. 그 다음 문제가 정원을 기존 의대에 배분하느냐, 의대를 신설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데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확정·발표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2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권 의대 신설 움직임은 지난 1990년 10월 시작됐다. 당시 목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목표대 의과대 신설을 건의했다. 이후 순천대를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 유치 운동도 불이 붙었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이를 공약했으나 당선 후 무기한 연기됐다.

그동안 신설이 무산된 결정적인 원인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대가 우선 지목되고 있다. 의대 설립은 의대 총 정원 확정(증원·보건복지부)→대학별 의대 설립계획서 신청(교육부)→의대설립심사위원회 심의→의대 신설 인가(교육부) 순의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첫 관문인 의대 정원 증원 단계에서부터 막혀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의대 정원 증원은 지

전남도 관계자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부재는 도농 의료 격차로 인한 주민 건강권 침해와 불평, 정주 여건 악화, 자본 역외 유출 등을 불러와 전남을 더욱 낙후되게 만들고 있다"며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매년 78만명(1조3000억원)이 상급병원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타 시도의 대학병원 등을 찾고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당 대표 그만뒀어도 최고위원 임기 보장...민주당, 임기 분리 추진 중진 당권주자들은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해 적용하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당헌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당론에 따라 당 대표가 대권출마를 위해 임기를 중간 사퇴하면 최고위원들의 임기도 중단되던 것을 방지했다.

민주당관계자는 25일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임기 분리 규정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확정해 내주 전준위 전체 회의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에 부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를 다음 정기 전당대회까지로 바꾸고, 당

대표 권위로 임시 전대를 개최할 경우 '최고위원을 선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새로 담을 예정이다.

당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 하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알려졌다. 이대로 당헌 개정이 이뤄지면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당대표가 재임 6개월여 만에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은 자리를 유지하고 2년 임기를 채우게 된다. 그간 '임기 분리' 당헌 개정에 대해 유력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당권 도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다른 주자들이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반발이 나온다.

이낙연 의원은 물론 다른 당권주자들도 전대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후보 난립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대표에 도전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김부겸 전 의원 측은 "위헌설법(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으로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 측은 "기존 당헌을 임기 분리로 해석하는 것과 당헌을 실제로 고치는 것은 다르다"며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홍영표 의원 측은 "당 대표

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한 경우가 없고 그것을 명문화하는 것은 더 문제"라며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이 특정인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현재 당헌은 지도체제가 불안정했던 시기에 대표가 몰려나면 지도부가 다같이 몰려나온 관행을 반영한 것인데, 지금 지도체제가 안정된 상황에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며 "누구를 위해 당헌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당은 중립"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코로나19로 답답하시죠?

청정제주 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

- 제1일 : 제주 도착 - 숙소
- 제2일 : 호텔조식 후 출발 - 카멜리아힐 - 서커스월드 - 중식 - 서핑체험 - 제주비경 - 호텔
- 제3일 : 기념품전시장 - 승마체험 - 성읍민속마을 - 중식 - 에코랜드 - 해녀촌 - 제주출발

블루나레 (제주↔완도)

제주-육지 최단시간 1시간20분

골드스텔라 (제주↔여수)

초호화 대형여객선

T. 064.747-8000 F. 064.747-2590 H. 010-6865-7000